

Working Paper 99-51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 연구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 토 연 구 원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및 연구시점 10
3. 인구이동의 개념과 이동유형 10
4.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동향 12

제2장 지역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원인

1. 전국 인구이동의 흐름 15
2. 권역별 인구이동의 변화 18
3. 이동사유 26

제3장 수도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1.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31
2.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 39
3. 수도권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44
 - 1) 산업구조의 변화 44
 - 2) 주택 수요와 공급 48
 - 3) 교외화 현상 50
 - 4) 지역정책 51

제4장 결 론

- 참고문헌 55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추이, 1970-97	16
<표 2> 1987년, 1997년 시점 최근 5년간 이동방향별 인구이동 비율	18
<표 3>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19
<표 4>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출인구의 변화, 1970-97	21
<표 5>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22
<표 6>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출인구의 변화, 1970-97	25
<표 7> 전국의 권역별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32
<표 8> 수도권 전출입인구의 변화, 1970-97	34
<표 9> 수도권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35
<표 10> 수도권의 각권역별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38
<표 11> 수도권의 순전입인구, 1997	39
<표 12> 수도권 전입자의 분포, 1971-1997	40
<표 13> 수도권의 시도간 순이동, 1997	41
<표 14>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970-1995	45
<표 15> 지역별 제조업종사자 구성비 증가추이, 1970-1995	46
<표 16> 지역별 생산자서비스 종사자수의 증가추이, 1980-1997	47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인구이동 추이, 1970-97	15
<그림 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전망	17
<그림 3> 권역별 인구이동의 변화추이, 1970-2020	24
<그림 4> 가구주의 이동 요인	27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이주원인	28
<그림 6> 연령별 이주희망 여부	29
<그림 7> 장래 이주 희망지역	30
<그림 8> 장래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사유	30
<그림 9>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규모	37
<그림 10> 수도권의 각권역별 순접입인구, 1970-97	38
<그림 11> 수도권 인구성장지역과 교외지역, 1995	43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공간구조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집합체이고, 각기 다른 성격과 특성을 지닌 요인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또 서로 기능적인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활동을 창출한다. 따라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공간구조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역시 인구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 중 이동의 원인이나 이동 인구의 흐름의 방향, 이동형태 및 이동인구의 특성에 관한 인구이동 분석은 지역의 공간구조적 성격을 규명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해 준다. 인구이동의 규명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개발 및 장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진 현상이며 주지하다시피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불균형 문제와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이동 인구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지역간 인구이동의 전망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별 인구의 균등한 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데 반석이 될 것이다.

인구이동에 관한 제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 중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기본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의 수도권으로 집중에만 초점을 두어왔을 뿐 인구이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행태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관련된 센서스 자료 및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동인구의 규모와 이동방향을 고찰하고, 수도권지역 인구이동의 공간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시점

1960년 이후 급속한 인구성장과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서울대도시권으로 인구이동의 주류가 형성되는데,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지역으로 과도한 인구의 집중에 초점을 두어 시도간 인구이동양상과 지역내에서의 인구이동 특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흐름을 간파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수도권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광역시와 각도지역을 연계시켜 6개권역을 설정하기로 한다. 강원도를 강원권, 대전을 포함한 충청남북도를 충청권,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도를 전라권, 부산과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북도를 경상권, 제주도를 제주권으로 편의상 분류하였다.

1970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양상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흐름을 감안하여 1970년 이후부터 1997년 까지는 실수치로 분석하고 이후 2020년까지 장래인구추계치를 산정하여 1970-2020년의 기간을 연구시점으로 설정하여 인구이동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인구이동통계연보와 인구센서스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인구에 관련된 통계분석은 SAS 등의 통계팩키지를 사용하였다.

3. 인구이동의 개념과 이동유형

인구의 이동에는 통근이나 통학, 여행, 계절적 이동, 노동인구의 이동 등이 있으며,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주의 개념이 일반적이다.

인구이동에 관한 개념은 여러 학문의 각기 다른 관심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인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지역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활수준이 낮은 곳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곳을 향하여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인구이동을 지역적 차이가 빚어낸 사회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고 균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자연적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동이라 지칭하

고 개인의 지위향상 과정 또는 사회적 이주현상 과정으로 본다. 또한 경제학에서는 인구를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과 전 거주지와 목적지가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지리학에서는 어디서 이주하여 어디로 가는가 (where), 또 이주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하는 공간개념이 강조된 공간상의 혁신 확산의 한 과정으로 이주를 정의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주(移住)는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으로 대별되는데, 국내이동의 경우 市 경계나 道 경계를 넘는 市道間 이동(inter-province)과 이주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市道는 같으나 洞·읍·面이 다른 市道內 이동(intra-province)으로 구분된다. 또 시도내 이동에는 도심지내 이동, 교외지역내의 이동, 도심지에서 교외지역으로의 이동, 교외지역에서 도심지로의 전입 등이 있고, 시도간 이동으로는 이주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과 농촌에서 중소도시를 경유하여 대도시로 진입하는 단계적 이주과정을 포함한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주, 도시지역의 농촌 전출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귀환하는 양상을 내포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등 세 가지가 있고 그 밖에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유형이 있다.

이주 기간에 따라 분류해보면 최소비용과 노력으로 임시적인 이동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임시이동(temporary move)이 있고, 대학의 입학이나 군복무기간 또는 일정기간의 취업 등 거주지의 임시 이동을 포함하여 영구이동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일시이동(transient move), 일반적 이주의 개념이 되는 영구이동(permanent move) 등이 있다.

이러한 이주는 이동의 형태에 따라 행정경계를 뛰어 넘는 인구이동(migration)과 행정구역 내에서 옮겨다니는 지역간 이동(local mobility), 또 출발하여 되돌아올 목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혹은 거주지에 도착하기까지 경유하게 되는 특정지점(stopping place) 간의 상호교환이동(reciprocal movement)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전입, 전출,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순전입 등이 있는데 이때 전입이란 특정한 행정구역(동·읍·면) 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옴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전출은 이와 상반되는 상황을 뜻하여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감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이다. 시도내이동이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같으나 동·읍·면이 다른 경우로 여기서 시란 광역시 이상의 시를 의미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시도간이동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또한 권역

별이동이란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 권역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간이동의 의미와 흡사하다. 순전입이란 일반적으로 순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특정한 지역내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를 말하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를 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라고 한다. 보통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출되어 전출초과의 경우는 부(負, -)의 수치로 표시된다.

4.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동향

인구이동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라벤슈타인의 “이주법칙”에 관한 논거이다. 이는 단거리 이동이 이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동률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이동에 있어서는 농촌에서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 이동의 주류를 흐름의 방향이 큰 상업지역이나 산업중심지로 향한다는 일반원리와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동은 그에 상쇄하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반전(역류)현상으로 지역인구를 보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순이동이 총이동보다는 적게 산출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도시출신은 농촌출신 보다 이동성향이 적어 지역의 순이동은 농촌->도시로의 흐름이 주가 된다는 점, 인구의 분산과정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침입하여 유사한 거주형상으로 변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 거대한 산업 중심지나 상업요지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장거리 이동을 창출시킨다는 점,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성향이 크다는 점 등 일곱가지 일반적인 인구이동의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초기연구는 지역인구의 예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는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지역간 인구 이동량이 급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간의 경제사회학적인 격차와 직결됨에 따라 인구이동문제는 이동량 뿐만 아니라 이동의 방향, 이동을 유발시키는 원인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종래의 인구예측만을 위한 목적 이외에 지역성장과 적정 인구배치라는 정책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1960년 전후에는 출발지나 목적지의 어떤 요인들이 이동을 결정하는데 주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계량학적 이동모형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토다로는 지역간의 임금격차가 인구이동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면서 제3세계의 도농간 인구이동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도농간 실질적 소득격차에 의해서라기 보다 도시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기대소득과 농촌의 실질소득에 나타난 격차에 의한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기초하여 라우리는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고

실업지역에서 저실업지역으로의 사회이동에 따라 지역간 실업률과 임금율이 균형화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 경제변수에 중력모형의 변수를 결합한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변수를 다루고 도시화율의 지표가 되는 비농업부문의 종사자수와 이동의 장애요인인 거리를 분석함으로써 간단하면서도 개념상 완벽한 이동모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도시내 생태학적 변이과정과 도시형태의 창출이나 유지차원에서 이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몬스는 '누가 왜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관한 거주지 이동패턴의 연구를 행하여 주거지역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인구이동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주장하였다. 루이스는 이주에 있어 공간개념을 강조하면서 라벤슈타인의 고전적 이주모형을 기초로 이주범주의 다양성을 논하고 이주의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도시배후, 즉 주변지역에서 보다 발전된 도시지역으로의 단거리 이동이 이주현상의 주된 흐름이고, 작은지역에서 점차 큰 도시지역으로 이주반경을 넓혀 간다는 단계별 이주행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간의 이주양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감소되는 이주행태라 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계층적인 이주패턴에 관해 언급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상향적 이주가 일반적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이주에 있어 가족구성원이나 이웃의 관계가 있는 곳으로 채널화된 이주(channelized migration) 또는 연쇄(chain) 형태의 이주현상이 나타나는 연쇄이주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별로 볼 때 시도간의 인구이동, 도농간의 인구이동, 도시내부에서의 인구이동에 관한 유형별 연구가 행해졌다. 1970년대 초까지 서울에만 집중되었던 인구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주변지역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서울이 갖는 경제기능의 확산, 각종 산업체의 이전과 확산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1970년 이후 지속된 서울의 수도권 공장이전 정책으로 인한 제조업의 성장은 그 지역의 성장과 서울인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70-75년부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집적의 불이익 및 지방분산정책에 의한 인구집중 반전현상이 일어났고,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전출동기가 경제적 생활고에 따른 배출요인에서 비롯되어 전입지의 취업 등 경제적 동기가 흡인요인이 되어 인구이동을 유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구팽창과 제조업 성장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제조업의 성장이 인구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임이 지적된 바 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1960년대를 전후해서 4단계로 구분하여 인구이동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1876년까지는 전통적인 사회이주가 주로 이루어졌고 1876-1945년 기간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인구이동이 주가 되었으며 1945-1960년의 기간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망명인구의 귀환이 특징적인 시기이고, 1960년 이후는 도시화의 증대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소수 대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 편중되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인구이동이 현재 당면한 중요연구 과제가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장

지역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원인

1. 전국 인구이동의 흐름

1997년 한해 동안 총 8,819,909명이 행정경계를 넘어 이동하여 전국인구의 19%가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도내 이동자는 5,981,467명으로 전국인구의 12.9%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시도간 이동자가 전국인구의 6.1%인 2,838,442명인데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 이후 1997년 현재까지 총이동인구의 증감폭과 거의 비례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인구이동의 흐름에서 市道内の 이동이 市道間의 이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그림 1).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장거리이동보다는 단거리이동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접지역에서의 유입을 설명한 라벤슈타인의 거리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인구이동 추이, 1970-97

<표 1>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추이, 1970-97

(단위: 명,%)

연도	총이동인구	시도내 이동인구	시도간 이동인구
1970	4,046,536 (13.1)	2,780,068 (9.0)	1,266,468 (4.1)
1971	4,210,164 (13.5)	2,878,091 (9.2)	1,322,073 (4.3)
1972	3,687,938 (11.7)	2,619,367 (8.3)	1,068,571 (3.4)
1973	4,860,418 (15.1)	3,435,573 (10.7)	1,424,845 (4.4)
1974	5,297,969 (16.1)	3,709,343 (11.3)	1,588,626 (4.8)
1975	9,011,440 (26.7)	6,143,486 (18.2)	2,867,954 (8.5)
1976	6,773,250 (19.5)	4,620,297 (13.3)	2,152,953 (6.2)
1977	7,396,623 (20.9)	5,234,058 (14.8)	2,163,565 (6.1)
1978	8,285,573 (21.9)	5,867,479 (16.2)	2,542,797 (7.0)
1979	7,324,380 (19.9)	4,974,831 (13.5)	2,349,549 (6.4)
1980	8,285,573 (21.9)	5,652,936 (15.0)	2,605,637 (6.9)
1981	8,194,516 (21.4)	5,401,067 (14.1)	2,793,449 (7.3)
1982	8,616,474 (22.1)	5,806,253 (14.9)	2,810,221 (7.2)
1983	9,795,811 (24.7)	6,584,773 (16.6)	3,211,038 (8.1)
1984	9,043,238 (22.4)	6,033,834 (15.0)	3,009,404 (7.4)
1985	8,679,097 (21.4)	5,753,800 (14.2)	2,925,297 (7.2)
1986	8,660,428 (20.8)	5,639,139 (13.8)	3,021,289 (7.4)
1987	9,308,750 (22.6)	6,065,385 (14.7)	3,243,365 (7.9)
1988	9,969,020 (23.9)	6,616,530 (15.9)	3,352,490 (8.0)
1989	9,316,214 (22.0)	6,126,613 (14.5)	3,189,608 (7.5)
1990	9,459,209 (22.0)	6,228,081 (14.5)	3,231,128 (7.5)
1991	8,980,841 (20.6)	6,022,999 (13.8)	2,957,842 (6.8)
1992	9,031,576 (20.5)	6,171,816 (14.0)	2,859,760 (6.5)
1993	8,807,058 (19.8)	5,943,391 (13.4)	2,863,667 (6.4)
1994	8,791,714 (19.5)	6,052,025 (13.4)	2,739,689 (6.1)
1995	9,073,069 (19.9)	6,208,130 (13.6)	2,864,939 (6.3)
1996	8,854,973 (19.2)	6,018,884 (13.0)	2,836,089 (6.2)
1997	8,819,909 (19.0)	5,981,467 (12.9)	2,838,442 (6.1)

자료: 경제기획원, 1970-89, 인구이동통계연보
 대한통계협회, 1990-93,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1995-97, 인구이동통계연보

주: ① 상기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② 괄호안의 수치는 전국인구수를 분모로한 이동율임.

1970-1997년의 28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이동율은 평균 21.0%로 일본의 이동율 5.3%, 중국의 8.1% 등과 대조를 이룬다. 1975년 26.7%의 이동율을 최고점으로 다소

둔화되는 듯 하였으나 1983년 24.7%, 1988년 23.9%를 나타내는 등 국가의 지역정책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수치가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은 이동율이 점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2020년까지 기간동안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고 정보화 시대에 따른 지방화가 고착되는 장래에는 이동율이 점차 안정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 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전망

인구이동의 방향은 시부→시부, 시부→군부, 군부→시부, 군부→군부 등의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부지역과 시부지역 사이의 이동이 가장 많다. 1980년대 후반까지 시부지역과 시부지역 사이의 이동은 1986년에 5,987,000명, 1987년에 6,412,000명, 1988년에 7,093,000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부지역 인구증가의 주요배경이 군부지역에서 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로써, 시부지역과 군부지역에서 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 도시화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군부지역에서 시부지역으로 향하는 인구이동의 흐름은 현저히 감소하여 시부지역간의 이동이 인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구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의 이동 방향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동 인구는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과, 가구의 생애주기단계상 20-30대 연령층의 어린 자녀들로 짐작되는 14세 이하 연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퇴직과 함께 쾌적한 전원생활을 추구하며 도시를 떠나거나 실직으로 인해 귀향하는 등의 사유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에

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는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15-24세 연령층과 이들의 부양부모 연령층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혹은 65세 이상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2> 1987년, 1997년 시점 최근 5년간 이동방향별 인구이동 비율

(단위: %)

	1987년 현재 최근5년간 인구이동	1997년 현재 최근 5년간 인구이동
시부→시부	68.9	77.4
시부→군부	10.2	10.1
군부→시부	14.1	9.9
군부→군부	6.8	1.6

출처: 경제기획원, 1988,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1997, 인구이동특별조사보고서.
주: 외국에서 국내로 이주한 인구는 제외하였음.

2. 권역별 인구이동의 변화

권역간의 인구이동은 권역내의 인구이동을 포함한 경우와 권역내의 인구이동을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서 나타나는 전입, 전출, 순이동의 세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연도	총전입인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70	1,266,468	749,889	47,474	106,218	72,469	285,157	5,261
	100.0%	59.2%	3.8%	8.4%	5.7%	22.5%	0.4%
1971	1,332,073	783,479	55,742	107,434	82,359	296,422	6,637
	100.0	58.8	4.2	8.1	6.2	22.3	0.5
1972	1,068,571	545,556	49,078	104,197	85,881	276,665	7,194
	100.0	51.1	4.6	9.8	8.0	25.9	0.7
1973	1,424,845	744,445	60,947	117,157	103,838	388,771	9,687
	100.0	52.2	4.3	8.2	7.3	27.3	0.7
1974	1,588,626	808,371	54,029	116,543	93,769	506,318	9,596
	100.0	50.9	3.4	7.3	5.9	31.9	0.6
1975	2,867,954	1,508,409	113,931	256,467	223,515	748,914	16,718
	100.0	52.6	4.0	8.9	7.8	26.1	0.6
1976	2,152,953	1,089,190	85,707	183,083	189,620	592,371	12,982
	100.0	50.6	4.0	8.5	8.8	27.5	0.6
1977	2,163,565	1,069,169	83,550	185,172	185,287	628,128	12,259
	100.0	49.4	3.9	8.6	8.6	29.0	0.6
1978	2,542,797	1,245,857	93,916	222,946	220,353	745,432	14,293
	100.0	49.0	3.7	8.8	8.7	29.3	0.6
1979	2,349,549	1,193,785	82,845	196,320	194,935	666,763	14,901
	100.0	50.8	3.5	8.4	8.3	28.4	0.6
1980	2,605,637	1,300,844	106,833	237,579	248,139	694,525	17,717
	100.0	48.7	4.1	9.1	9.5	26.7	0.7
1981	2,793,449	1,361,494	104,075	216,545	254,504	836,772	18,059
	100.0	48.7	3.7	7.8	9.1	30.0	0.6
1982	2,810,221	1,454,987	97,706	213,257	231,630	795,670	16,971
	100.0	51.8	3.5	7.6	8.2	28.3	0.6
1983	3,211,038	1,750,744	100,262	238,101	256,426	842,972	22,533
	100.0	54.5	3.1	7.4	8.0	26.3	0.7
1984	3,009,404	1,630,452	98,599	225,603	229,853	805,583	19,314
	100.0	54.2	3.3	7.5	7.6	26.8	0.6
1985	2,925,297	1,591,443	97,530	229,768	231,559	757,768	17,229
	100.0	54.4	3.3	7.9	7.9	25.9	0.6
1986	3,021,289	1,589,598	91,805	225,140	344,749	752,825	17,172
	100.0	52.6	3.0	7.5	11.4	24.9	0.6
1987	3,243,365	1,727,853	91,755	236,269	352,182	816,878	18,428
	100.0	53.3	2.8	7.3	10.9	25.2	0.6
1988	3,352,490	1,860,005	82,272	233,782	365,461	792,639	18,331
	100.0	55.5	2.5	7.0	10.9	23.6	0.5
1989	3,189,606	1,769,593	78,907	277,595	336,481	707,854	19,176
	100.0	55.5	2.5	8.7	10.5	22.2	0.6
1990	3,231,128	1,770,574	81,765	297,433	348,390	710,475	22,491
	100.0	54.8	2.5	9.2	10.8	22.0	0.7
1991	2,957,842	1,550,219	78,674	298,588	322,405	686,582	21,374
	100.0	52.4	2.7	10.1	10.9	23.2	0.7
1992	2,859,760	1,527,803	79,016	282,118	297,984	652,390	20,449
	100.0	53.4	2.8	9.9	10.4	22.8	0.1
1993	2,863,667	1,578,907	75,483	289,860	280,275	620,637	18,505
	100.0	55.1	2.6	10.1	9.8	21.7	0.1
1994	2,739,689	1,551,028	70,861	264,225	258,123	578,937	16,515
	100.0	56.6	2.6	9.6	9.4	21.1	0.6
1995	2,864,939	1,600,495	79,147	294,067	299,350	573,345	18,335
	100.0	55.9	2.8	10.3	10.4	20.0	0.6
1996	2,836,089	1,547,804	82,359	310,036	288,025	478,694	19,256
	100.0	54.6	2.9	10.9	10.2	16.9	0.7
1997	2,838,442	1,541,631	86,007	319,346	290,121	580,894	20,443
	100.0	54.3	3.0	11.3	10.2	20.5	0.7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국 인구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의 인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거나, 행정구역상 관련된 광역시와 높은 연계를 이루며 대도시권화 현상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970-97년의 기간 동안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입이동인구의 규모는 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28년 기간의 각 권역별 평균 전입인구 규모는 수도권이 전체 전입인구의 54.2%를 차지하고 경상권이 25.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다음이 전라권으로 전체의 9.4% 전입규모를 나타냈고, 충청권이 8.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광역시의 규모에 따라 해당 권역별 전입인구의 규모 순위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져 우리나라의 전입인구이동은 도시순위규모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수도권의 전입인구규모는 1982년 이후 전체전입인구의 50%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경상권과 전라권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극심하게 일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970-97년의 기간 동안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출인구의 규모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의 순서로 나타났다. 28년 기간중 전체전출인구규모는 평균 2,575,384명으로 이중 수도권이 1,047,369명으로 40.7%, 경상권이 26.7%, 전라권이 14.2%, 충청권이 11.1%의 비율을 점유하였다. 수도권은 전입인구규모에 비해 전출인구의 규모가 낮는데 반해 다른 권역들은 모두 전출인구규모의 비율이 전입인구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얼마나 극심한지가 드러난다. 수도권은 대체로 1979년 이후 전출인구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상권과 전라권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다. 충청권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다 1990년에는 미약하게 증가와 감소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핵심적 연구단지의 개발과 함께 많은 산업시설물이 입지하고 정부청사의 이전 등 지역내 여러가지 변동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전입인구의 변화에서 보면 1970년 이후 충청권과 전라권의 각축이 꾸준히 전개되다 90년도 후반부부터 충청권의 전입인구규모가 다소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사항이 전출인구규모의 변화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 전라권의 전출인구규모는 28년 내내 충청권의 전출인구보다 많은 비율을 점유하여, 전라권에 비해 충청권이 인구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 이외에 행정관서의 입지나 산업시설물 등의 입지관련 사항이 인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 권역내 이동을 포함한 전출인구의 변화, 1970-97

연도	총전출인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70	1,266,468	357,536	83,696	201,355	250,111	362,414	8,415
	100.00%	28.20%	6.30%	15.90%	19.80%	28.60%	0.70%
1971	1,332,073	409,513	90,736	202,467	242,503	376,305	10,549
	100	30.7	6.8	15.2	18.2	28.3	0.8
1972	1,068,571	371,682	79,812	151,525	163,900	295,109	6,543
	100	34.8	7.5	14.2	15.3	27.6	0.6
1973	1,424,845	472,057	96,749	189,236	216,365	405,831	12,604
	100	33.1	6.8	13.3	15.2	28.5	0.9
1974	1,588,626	483,042	103,329	208,621	249,388	461,881	15,173
	100	30.4	6.5	13.1	15.7	29.1	1
1975	2,867,954	867,280	174,141	415,239	494,153	839,046	26,619
	100	30.2	6.1	14.5	17.2	29.3	0.9
1976	2,152,953	704,206	127,589	284,067	347,471	650,528	20,024
	100	32.7	5.9	13.2	16	30.2	0.9
1977	2,163,565	727,328	129,263	284,934	343,525	652,635	20,654
	100	33.6	6	13.2	15.9	30.2	1
1978	2,542,797	799,011	144,693	345,046	405,573	740,556	23,929
	100	31.4	5.7	13.6	16	29.1	0.9
1979	2,349,549	847,444	133,125	297,746	364,761	672,203	19,754
	100	36.1	5.7	12.7	15.5	28.6	1
1980	2,605,637	998,492	131,343	314,886	402,136	725,566	19,065
	100	38.3	5	12.1	15.4	27.9	0.7
1981	2,793,449	1,074,092	126,451	307,324	366,965	882,144	19,503
	100	38.5	4.5	11	13.1	31.6	0.7
1982	2,810,221	1,135,273	127,514	302,710	358,019	858,603	20,102
	100	40.4	4.5	10.8	12.7	30.6	0.7
1983	3,211,038	1,323,615	144,945	340,848	415,563	932,590	24,443
	100	41.2	4.5	10.6	12.9	29	0.8
1984	3,009,404	1,246,845	140,801	326,169	384,322	875,936	23,516
	100	41.4	4.7	10.8	12.8	28.9	0.8
1985	2,925,297	1,284,772	126,034	299,311	353,022	832,414	20,663
	100	43.9	4.3	10.2	12.1	28.5	0.7
1986	3,021,289	1,308,145	125,304	286,908	465,123	806,278	20,737
	100	43.3	4.2	9.5	15.4	26.7	0.7
1987	3,243,365	1,406,818	136,887	313,583	514,687	850,104	21,286
	100	43.4	4.2	9.7	15.9	26.2	0.7
1988	3,352,490	1,545,643	134,754	308,881	511,047	832,104	20,061
	100	46.1	4	9.2	15.2	24.8	0.6
1989	3,189,606	1,442,351	136,840	341,060	474,742	765,197	19,407
	100	45.2	4.3	10.7	14.9	24	0.6
1990	3,231,128	1,494,370	129,402	335,295	473,323	779,375	19,363
	100	46.2	4	10.4	14.6	24.1	0.6
1991	2,957,842	1,329,638	116,704	318,548	429,236	745,118	18,598
	100	45	3.9	10.8	14.5	25.2	0.6
1992	2,859,760	1,358,435	103,861	286,250	383,741	708,729	18,744
	100	47.5	3.6	10	13.4	24.8	0.7
1993	2,863,667	1,427,378	100,069	274,405	357,139	684,442	20,234
	100	49.8	3.5	9.6	12.5	23.9	0.7
1994	2,739,689	1,428,587	89,332	257,937	317,330	627,843	18,660
	100	52.1	3.3	9.4	11.6	22.9	0.7
1995	2,864,939	1,531,323	88,497	270,631	332,650	622,677	19,161
	100	53.5	3.1	9.4	11.6	21.7	0.7
1996	2,836,089	1,494,034	90,229	277,307	321,828	632,342	20,349
	100	52.6	3.2	10	11.3	22.3	0.7
1997	2,838,442	1,479,162	86,929	290,728	318,883	641,703	21,037
	100	52.1	3.1	10.2	11.2	23.6	0.7

<표 5>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연도	총전출인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70	844,859	524,352	47,474	88,823	57,134	121,815	5,261
	100.00%	62.10%	5.60%	10.50%	6.80%	14.40%	0.60%
1971	887,860	537,743	55,742	88,546	65,310	133,882	6,637
	100	60.6	6.3	10	7.4	15.1	0.7
1972	710,393	361,753	49,078	88,819	71,997	131,552	7,194
	100	50.9	6.9	12.5	10.1	18.5	1
1973	936,961	494,034	60,947	99,371	85,316	187,606	9,687
	100	52.7	6.5	10.6	9.1	20	1
1974	1,053,102	551,808	54,029	97,834	76,310	263,525	9,596
	100	52.4	5.1	9.3	7.2	25	0.9
1975	1,933,831	1,047,063	113,931	215,012	181,763	359,344	16,718
	100	54.1	5.9	11.1	9.4	18.6	0.9
1976	1,432,848	742,390	85,707	157,359	160,931	273,479	12,982
	100	51.8	6	11	11.2	19.1	0.9
1977	1,405,080	707,426	83,550	157,778	156,739	287,328	12,259
	100	50.3	5.9	11.2	11.2	20.4	0.9
1978	1,691,073	843,402	93,916	190,859	186,035	362,568	14,293
	100	49.9	5.6	11.3	11	21.4	0.8
1979	1,494,494	747,186	82,845	164,163	170,112	315,287	14,901
	100	50	5.5	11	11.4	21.1	10
1980	1,633,579	771,654	106,833	200,951	214,437	321,987	17,717
	100	47.2	6.5	12.3	13.1	19.7	1.1
1981	1,598,821	755,640	104,075	188,087	224,249	308,711	18,059
	100	47.3	6.5	11.8	14	19.3	1.1
1982	1,566,417	771,590	97,706	184,303	202,641	293,206	16,971
	100	49.3	6.2	11.8	12.9	18.7	1.1
1983	1,790,587	916,778	100,262	206,040	225,311	319,663	22,533
	100	51.2	5.6	11.5	12.6	17.9	1.3
1984	1,653,465	838,635	98,599	194,102	200,621	302,194	19,314
	100	50.7	6	11.7	12.1	18.3	1.2
1985	1,577,771	764,695	97,530	198,133	204,469	275,715	17,229
	100	49.1	6.3	12.7	13.1	17.7	1.1
1986	1,533,579	743,353	91,805	193,930	205,445	281,874	17,172
	100	48.5	6	12.6	13.4	18.4	1.1
1987	1,636,314	805,111	91,755	213,717	207,007	300,296	18,428
	100	49.2	5.6	13.1	12.7	18.4	1.1
1988	1,585,265	795,023	82,272	199,696	204,953	284,990	18,331
	100	50.2	5.2	12.6	12.9	18	1.2
1989	1,514,211	777,938	78,907	195,816	191,052	251,322	19,176
	100	51.4	5.2	12.9	12.6	16.6	1.3
1990	1,512,361	747,933	81,765	212,991	2,007,258	246,456	22,491
	100	49.5	5.4	14.1	13.3	16.3	1.5
1991	1,399,543	670,219	78,674	214,433	181,900	232,943	21,374
	100	47.9	5.6	15.3	13	16.6	1.5
1992	1,314,269	613,283	79,016	207,140	173,979	220,402	20,449
	100	46.7	6	15.8	13.2	16.8	1.6
1993	1,264,743	586,458	75,483	214,468	165,127	204,702	18,505
	100	46.4	6	17	13.1	16.2	1.5
1994	1,146,385	523,568	70,861	191,543	151,046	192,852	16,515
	100	45.7	6.2	16.7	13.2	16.8	1.4
1995	1,202,537	515,683	79,147	212,654	173,417	203,301	18,335
	100	42.9	6.6	17.7	14.4	16.9	1.5
1996	1,222,426	516,644	82,359	226,006	171,694	206,467	19,256
	100	42.3	6.7	18.5	14	16.9	1.6
1997	1,221,703	518,745	86,007	229,437	171,991	195,080	20,443
	100	42.5	7	18.8	14.1	16	1.7

전국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집중 분산양상은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경우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1970년-97년의 기간 동안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입인구 이동에서는 전입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으로 전입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평균 682,710명으로 전체 전입인구의 49.4%를 차지하였다. 이는 1970년 전체 전입인구의 62.1%의 비중을 차지하였던데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국토면적의 11%정도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에 매년 이동인구의 50%가 모여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치임이 분명하다. 수도권전입인구의 규모는 1970년대에는 50% 이상을 상회하며 꾸준히 많은 비율을 점유하다 1975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00년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어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산업시설의 지역 균등 배치 등에 의해 2020년까지 40% 이하의 비율로 낮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이외의 권역 가운데 전입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의 순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라권의 전입인구규모가 충청권의 전입인구규모 보다 많은 비율을 점유했으나 1987년을 기점으로 충청권의 전입인구규모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서서는 충청권의 전입인구 비율이 경상권보다도 많은 비율을 점유하게 되어 정부정책과 산업시설물 등이 인구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비율의 안배는 당분간 계속 이어져 2000년대에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의 비율로 순서지어지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전입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타권역의 전입인구가 약간씩 증가하며 경상권과 전라권의 전입인구규모는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3).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출인구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까지는 수도권 다음으로 전라권의 전출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1992년 이후부터 전라권의 전출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강원권의 전출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대신 제주권의 전출 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매년 수도권은 28.0%의 비율을 평균적으로 차지하였고, 경상권은 21.7%, 전라권은 21.3%, 충청권은 17.5%의 비율을 점유하였으며 강원권은 8.0%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제주권은 1990년에 이르러 약 1.5% 가량의 전출인구규모를 타나내기 시작했다.

향후 2020년까지 전출인구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의 전출인구는 점증하여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대신 제주권은 2%, 강원권은 7% 내외, 충청권은 14% 내외, 전라권 역시 14%, 경상권은 15%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 권역별 인구이동의 변화추이, 1970-2020

<표 6> 권역내 이동을 제외한 전출인구의 변화, 1970-97

연도	총전출인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70	844,859	131,999	83,696	183,960	234,776	199,072	8,415
	100.00%	15.60%	9.90%	21.80%	27.80%	23.60%	0.70%
1971	887,860	163,777	90,736	183,579	225,454	213,765	10,549
	100	18.4	10.2	20.7	25.4	24.1	0.8
1972	710,393	187,879	79,812	136,147	150,016	149,996	6,543
	100	26.4	11.2	19.2	21.1	21.1	0.6
1973	936,961	221,646	96,749	171,450	197,843	204,666	12,604
	100	23.7	10.3	18.3	21.1	21.8	0.9
1974	1,053,102	226,479	103,329	189,912	231,929	219,088	15,173
	100	21.5	9.8	18	22	20.8	1
1975	1,933,831	405,934	174,141	373,784	452,401	447,476	26,619
	100	21	9	19.3	23.4	23.1	0.9
1976	1,432,848	357,406	127,589	258,343	318,782	331,636	20,024
	100	24.9	8.9	18	22.2	23.1	0.9
1977	1,405,080	365,575	129,263	257,540	314,977	311,835	20,654
	100	26.7	9.2	18.3	22.4	22.2	1
1978	1,691,073	396,556	144,693	312,959	371,255	357,692	23,929
	100	23.4	8.6	18.5	22	21.2	0.9
1979	1,494,494	400,845	133,125	265,589	339,938	320,727	19,754
	100	26.8	8.9	17.8	22.7	21.5	1
1980	1,633,579	469,302	131,343	278,258	368,434	353,028	19,065
	100	28.7	8	17	22.6	21.6	0.7
1981	1,598,821	468,238	126,451	276,866	336,710	354,083	19,503
	100	29.3	7.9	17.3	21.1	22.2	0.7
1982	1,566,417	451,876	127,514	273,756	329,030	356,139	20,102
	100	28.8	8.1	17.5	21	22.7	0.7
1983	1,790,587	489,649	144,945	308,787	384,448	409,281	24,443
	100	27.4	8.1	17.2	21.5	22.9	0.8
1984	1,653,465	455,028	140,801	294,668	355,090	372,547	23,516
	100	27.5	8.5	17.8	21.5	22.5	0.8
1985	1,577,771	458,024	126,034	267,676	325,932	350,361	20,663
	100	29.4	8.1	17.2	20.9	22.5	0.7
1986	1,533,579	461,900	125,304	255,698	325,819	335,327	20,737
	100	30.1	8.2	16.7	21.2	21.9	0.7
1987	1,636,314	484,076	136,887	291,031	369,512	333,522	21,286
	100	29.6	8.4	17.8	22.6	20.4	0.7
1988	1,585,265	480,661	134,754	274,795	350,539	324,455	20,061
	100	30.3	8.5	17.3	22.1	20.5	0.6
1989	1,514,211	450,696	136,840	259,290	329,313	318,665	19,407
	100	29.8	9	17.1	21.7	21	1.3
1990	1,512,361	471,729	129,402	250,853	325,658	315,356	19,363
	100	31.2	8.6	16.6	21.5	20.9	1.3
1991	1,399,543	449,638	116,704	234,393	288,731	291,479	18,598
	100	32.1	8.3	16.7	20.6	20.8	1.3
1992	1,314,269	443,915	103,861	211,272	259,736	276,741	18,744
	100	33.8	7.9	16.1	19.8	21.1	1.4
1993	1,264,743	434,929	100,069	199,013	241,991	268,507	20,234
	100	34.4	7.9	15.7	19.1	21.2	1.6
1994	1,146,385	401,127	89,332	185,255	210,253	241,758	18,660
	100	35	7.8	16.2	18.3	21.1	1.6
1995	1,202,537	446,511	88,497	189,218	206,717	252,433	19,161
	100	37.1	7.4	15.7	17.2	21	1.6
1996	1,222,426	462,874	90,229	193,277	205,497	250,200	20,349
	100	37.9	7.4	15.8	16.8	20.5	1.7
1997	1,221,703	456,276	86,929	200,819	200,753	255,889	21,037
	100	37.3	7.1	16.4	16.4	20.9	1.7

3. 이동사유

1988년에 전국의 3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동태 표본조사결과에서는 집세 만기 등의 주택문제로 이동한 가구가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직업(19.4%), 교통문제(18.8%) 등을 이유로 이주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밖에 가족(8.7%), 교육(1.7%), 건강(1.3%) 등을 꼽았다. 즉 이주하는 10명 중 4명이 전세·월세의 계약 만료로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주택문제로 이주한 사람들은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해서 이사하는 경우, 혹은 철거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택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다. 특히 주택문제를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은 군부지역보다 시부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10년후인 1997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 표본조사 결과는 이와 약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1997년 가구이동의 주요인은 직업(36.4%), 가족(23.5%), 주택문제(22.9%)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업요인으로는 구직이나 취업을 이유로 이동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근무장소의 이전이 31.1%로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사업관계로 거주지를 옮기는 비율도 18.5%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문제로 이주하는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했고 분가나 독립에 의한 원인도 15.7%나 되었다. 이 밖에 가족가까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9.5%의 비율을 나타냈다. 주택문제 중에서는 내집마련이 25.6%로 가장 많았고, 큰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이주가 20.5%로 집계되어 주택여과현상에 의한 이주도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임대만료 등에 의한 가구이동이 17.5%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하여 임대차 관련 시책이 호전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동거리별 이주원인을 살펴볼 때 시도내 이동에서는 주택문제가 4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시도간 이동일 경우에는 직업(45.0%)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구시군내 근거리 이동은 주택요인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큰 평수로 옮겨가거나 내집마련을 이유로, 또는 임대계약기간이 원인이 된 경우가 차례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구시군간 이동은 구시군내 이동에 비해 취업이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직업문제(26.8%)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족문제(25.2%)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교육문제(8.3%)가 원인인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간 이동에서는 직업문제(45.0%)가 보다 높은 사유로 드러났고 주택문제는 15.9%에 불과했다. 특히 시도간 이동에서는 자녀의 교육문제라던가 진학에 의한 교육문제

(12.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연환경은 보다 원거리 이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4).



〈그림 4〉 가구주의 이동 요인

연령계층별 이주 원인을 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최근 5년간 1회 정도의 이주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는데, 20-34세 연령층은 같은 기간 중 2회 이상 이주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동성이 큰 젊은 연령층의 이동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구시군내 단거리 이동은 10세 미만과 35세 이상의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구시군간 이동 또는 시도간 이동은 20대와 30대 초반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10대 가구주의 경우 단독가구가 주로인데 이들의 이주사유는 대부분이 진학과 학업에 의한 것이었다. 20대 연령층은 직업에 의한 이동이 최고를 나타내는데 20대 초반은 학업과 교육에 의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20대 후반은 결혼·분가 등을 이유로 한 가족원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30대 연령층 역시 근무지 이동 및 취업·사업 등 직업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가족문제, 주택문제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의 가구는 내집마련과 큰 집으로의 이주 등 주택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무지 이동 등 직업요인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0대 연령층에서는 큰 평수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문제가 이주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업과 근무지 이전 등으로 인한 이주도 많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생애주기단계상 자녀모두를 출가시키고 다시 핵가족으로 돌아와 집을 줄이기 위한 주택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분가한 자녀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 혹은 친인척과 근접해서 살기 위한 귀

향 등의 이주도 이주사유로 나타났다 (그림 5).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이주원인

전체 응답자의 47.1%가 현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이 이주희망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30대 후반 연령층부터는 이동 희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주희망자들의 대부분은 공동주택거주자로서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거주자들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보다도 이주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대가구의 경우 이주희망 의사가 더욱 뚜렷히 나타나 자택소유가구의 2배 이상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었고, 임대가구의 2/3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주택문제로 인한 거주지 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1-2년인 경우 59.1%가 재이주할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현거주지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주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



〈그림 6〉 연령별 이주희망 여부

장래 이주희망지역을 보면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의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기는 한다면 당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내에서는 수도권내의 이동희망이 89.4%를 차지해 수도권 과밀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광역시는 대부분 광역시 내에서의 이동희망 비율이 최고를 보이고 다음이 수도권, 인근 중소도시, 광역시간의 이주를 희망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이주희망자들은 같은 시도내에서의 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수도권, 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같은 구내에서의 이동(44.1%) 보다 같은 도내로의 이동(71.5%)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동희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같은 시도내에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는 주택문제(74.2%), 가족(결혼·분가 등 9.2%), 주거·근린(교통·문화 등 6.4%), 직업(3.7%), 교육(3.3%), 자연환경의 차례로 비율이 집계되어 단거리 이동에서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사유가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른 시도로의 이주에도 주택문제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가족요인과 직업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광역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직업, 가족요인의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정비계획 법안에서 제안되었던 공장총량과 대학총량의 두 부분이 인구를 흡인하는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와 읍면부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요인에 비해서 자연환경요인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8).



<그림 7> 장래 이주 희망지역



<그림 8> 장래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사유

제3장

수도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1.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1960년 이후 대도시지역으로 그 흐름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루어진 수도권으로의 집중화현상은 괄목할 만 하다. 1970-97년 기간중 전국의 순전입인구 변화에서 꾸준히 陽(+)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수도권지역 뿐이다. 나머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은 대부분 순전입이 負(-)의 수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70년 이후 28년간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 전입초과, 타권역 전출초과> 현상으로 압축된다 (표 7).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 이외의 일부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목된다. 1991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도간 순이동에서 전입초과를 나타낸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 제주도 뿐이었고, 서울을 포함한 그밖의 지역은 모두 전출초과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1992년을 분기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대도시와 충청남북도, 제주도의 일부 道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이전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고, 첨단 연구단지가 입지되어 있어 지식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청사가 이전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1993년 이후 순전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이 괄목할 만 하다. 이는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일관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흐름을 향후 어느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서울은 1990년대 들어서 전출초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입인구규모 면에서 인천과 경기지역으로의 전입인구가 타권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수도권으로의 인구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7> 전국의 권역별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단위:명)

연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70	392,353	-36,222	-95,137	-177,642	-77,257	-3,154
1971	373,966	-34,994	-95,033	-160,144	-79,883	-3,912
1972	173,874	-30,734	-47,328	-78,019	-18,444	651
1973	272,388	-35,802	-72,079	-112,527	-17,060	-2,917
1974	325,329	-49,300	-92,078	-155,619	-44,437	-5,577
1975	641,129	-60,210	-158,772	-270,638	-88,132	-9,901
1976	384,984	-41,882	-100,984	-157,851	-58,157	-7,042
1977	341,851	-45,713	-99,762	-158,238	-24,507	-8,395
1978	446,846	-50,777	-122,100	-185,220	4,876	-9,636
1979	346,341	-50,280	-101,426	-169,826	-5,440	-4,853
1980	302,352	-24,510	-77,307	-153,997	-31,041	-1,348
1981	287,402	-22,376	-88,779	-112,461	-45,372	-1,444
1982	319,714	-29,808	-89,453	-126,389	-62,933	-3,131
1983	427,129	-44,683	-102,747	-159,137	-89,618	-1,910
1984	383,607	-42,202	-100,566	-154,469	-70,353	-4,202
1985	306,671	-28,504	-69,543	-121,463	-74,646	-3,434
1986	281,453	-33,499	-61,768	-120,374	-53,453	-3,565
1987	321,035	-45,132	-77,314	-162,505	-33,226	-2,858
1988	314,362	-52,482	-75,099	-145,586	-39,465	-1,730
1989	327,242	-57,933	-63,465	-138,261	-57,343	-231
1990	276,204	-47,637	-37,862	-124,933	-68,900	3,128
1991	220,581	-38,030	-19,960	-106,831	-58,536	2,776
1992	169,368	-24,845	-4,132	-85,757	-56,339	1,705
1993	151,529	-24,586	15,455	-76,864	-63,805	-1,729
1994	122,441	-18,471	6,288	-59,207	-48,906	-2,145
1995	69,172	-9,350	23,436	-33,300	-49,132	-826
1996	53,770	-7,870	32,726	-33,803	-43,733	-1,093
1997	62,469	-922	28,618	-28,762	-60,809	-594

수도권의 총전출입 인구는 1970-74년 동안 1백만명대였으나, 1975년에 2,867,954명으로 2백만명대로 진입한 이후 1978-1982년 기간 동안 2백만명대를 유지하였다. 1983년에는 총전출입 인구가 3,211,038명으로 3백만명대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3,352,490명으로 최고점을 이루었다. 이후 총전출입 인구는 점차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다 1993년 부터는 2백만명선으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수도권 전입인구는 1974년 까지 1백만명 미만이었으나, 197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1,508,409명의 전입이 있었으며, 1975-88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1백만명 이상의 전입인구가 기록되었다. 1988년에는 1,860,005명이 전입되어 최고치를 이루었다. 총전출입 인구에 대한 수도권 전출입인구의 구성비는 전입이 연평균 약 53%이고 전출이 4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데, 전입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출인구의 비율은 매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그 비율의 분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인구증가를 가져온 순전입 인구규모는 1975년에 641,129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연평균 30만명 전후의 인구규모가 전입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1983년도를 고비로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은 1990년부터 이미 전출 초과지역이 되었고, 경기지역도 1995년에 375,514명이 순전입하여 최고치를 나타내다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다음해 부터는 그 수치가 둔화되고 있다 (표 9).

<표 8> 수도권 전출입인구의 변화, 1970-97

연도	총전출입인구	전입				전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70	1,266,468	749,889	510,194	239,695		357,536	216,366	141,170	
	100	59.2	40.3	18.9		28.2	17.1	11.1	
1971	1,332,073	783,479	513,149	270,330		409,513	260,460	149,053	
	100	58.8	38.5	20.3		30.7	19.6	11.2	
1972	1,068,571	545,556	363,388	182,168		371,682	224,614	147,068	
	100	51.1	34	17		34.8	21	13.8	
1973	1,424,845	744,445	486,350	258,095		472,057	301,760	170,297	
	100	52.2	34.1	18.1		33.1	21.2	12	
1974	1,588,626	808,371	538,666	269,705		483,042	307,934	175,108	
	100	50.9	33.9	17		30.4	19.4	11	
1975	2,867,954	1,508,409	994,692	513,717		867,280	535,123	332,157	
	100	52.6	34.7	17.9		30.2	18.7	11.6	
1976	2,152,953	1,089,190	714,786	374,404		704,206	453,896	250,310	
	100	50.6	33.2	17.4		32.7	21.1	11.6	
1977	2,163,565	1,069,169	681,190	387,979		727,318	465,794	261,524	
	100	49.4	31.5	17.9		33.6	21.5	12.1	
1978	2,542,797	1,245,857	789,153	456,704		799,011	510,625	288,386	
	100	49	31	18		31.4	20.1	11.3	
1979	2,349,549	1,193,785	705,925	487,860		847,444	557,500	289,944	
	100	50.8	30	20.8		36.1	23.7	12.3	
1980	2,605,637	1,300,844	782,050	518,794		998,492	617,146	381,346	
	100	49.9	30	19.9		38.3	23.7	14.6	
1981	2,793,449	1,361,494	769,261	442,432	149,801	1,074,092	620,879	339,519	113,694
	100	48.7	27.5	15.8	5.4	38.5	22.2	12.2	4.1
1982	2,810,221	1,454,987	797,295	524,414	133,278	1,135,273	665,435	346,578	123,260
	100	51.8	28.4	18.7	4.7	40.4	23.7	12.3	4.4
1983	2,211,038	1,750,744	923,558	660,076	167,110	1,323,615	781,717	402,767	139,121
	100	79.2	41.8	29.9	7.6	59.9	35.4	18.2	6.3
1984	3,009,404	1,630,452	844,174	604,744	181,534	1,246,845	711,428	399,521	135,896
	100	54.2	28.1	20.1	6	41.4	23.6	13.3	4.5
1985	2,925,297	1,591,443	776,830	637,997	176,616	1,284,772	746,466	403,803	134,503
	100	54.4	26.6	21.8	6	43.9	25.5	13.8	4.6
1986	3,021,289	1,589,598	748,021	675,197	166,380	1,308,145	753,844	418,900	135,401
	100	52.6	24.8	22.3	5.5	43.3	25	13.9	4.5
1987	3,243,365	1,727,853	837,944	706,866	183,043	1,406,818	753,545	515,414	137,859
	100	53.3	25.8	21.8	5.6	43.4	23.2	15.9	4.3
1988	3,352,490	1,860,005	956,689	707,942	195,374	1,545,643	768,133	629,100	148,410
	100	55.5	28.5	21.1	5.8	46.1	22.9	18.8	4.4
1989	3,189,606	1,769,593	862,257	704,918	202,418	1,442,351	752,613	553,734	136,004
	100	55.5	27	22.1	6.3	45.2	23.6	17.4	4.3
1990	3,231,128	1,770,574	754,071	767,411	249,092	1,494,370	845,063	516,900	132,407
	100	54.8	23.3	23.8	7.7	46.2	26.2	16	4.1
1991	2,879,857	1,550,219	673,187	663,011	214,021	1,329,638	710,066	485,949	133,623
	100	53.8	23.4	23	7.4	46.2	24.7	16.9	4.6
1992	2,859,760	1,527,803	630,859	697,998	198,946	1,358,435	735,743	483,127	139,565
	100	53.4	22.1	24.4	7	47.5	25.7	16.9	4.9
1993	3,006,285	1,578,907	611,122	779,555	188,230	1,427,378	793,754	485,057	148,567
	100	52.5	20.3	25.9	6.3	47.5	26.4	16.1	4.9
1994	2,739,689	1,551,028	573,980	798,417	178,631	1,428,587	810,477	476,340	141,770
	100	56.6	21	29.1	6.5	52.1	29.6	17.4	5.2
1995	2,864,939	1,600,495	561,492	869,652	169,351	1,531,323	883,390	497,138	150,795
	100	55.9	19.6	30.4	5.9	53.5	30.8	17.4	5.3
1996	2,836,089	1,547,804	588,401	793,870	165,533	1,243,493	799,638	290,660	153,195
	100	54.6	20.7	28	5.8	43.8	28.2	10.2	5.4
1997	2,838,442	1,541,631	589,434	7,742,556	177,941	1,479,162	767,753	560,508	150,901
	100	54.3	20.8	272.8	6.3	52.1	27	19.7	5.3

<표 9> 수도권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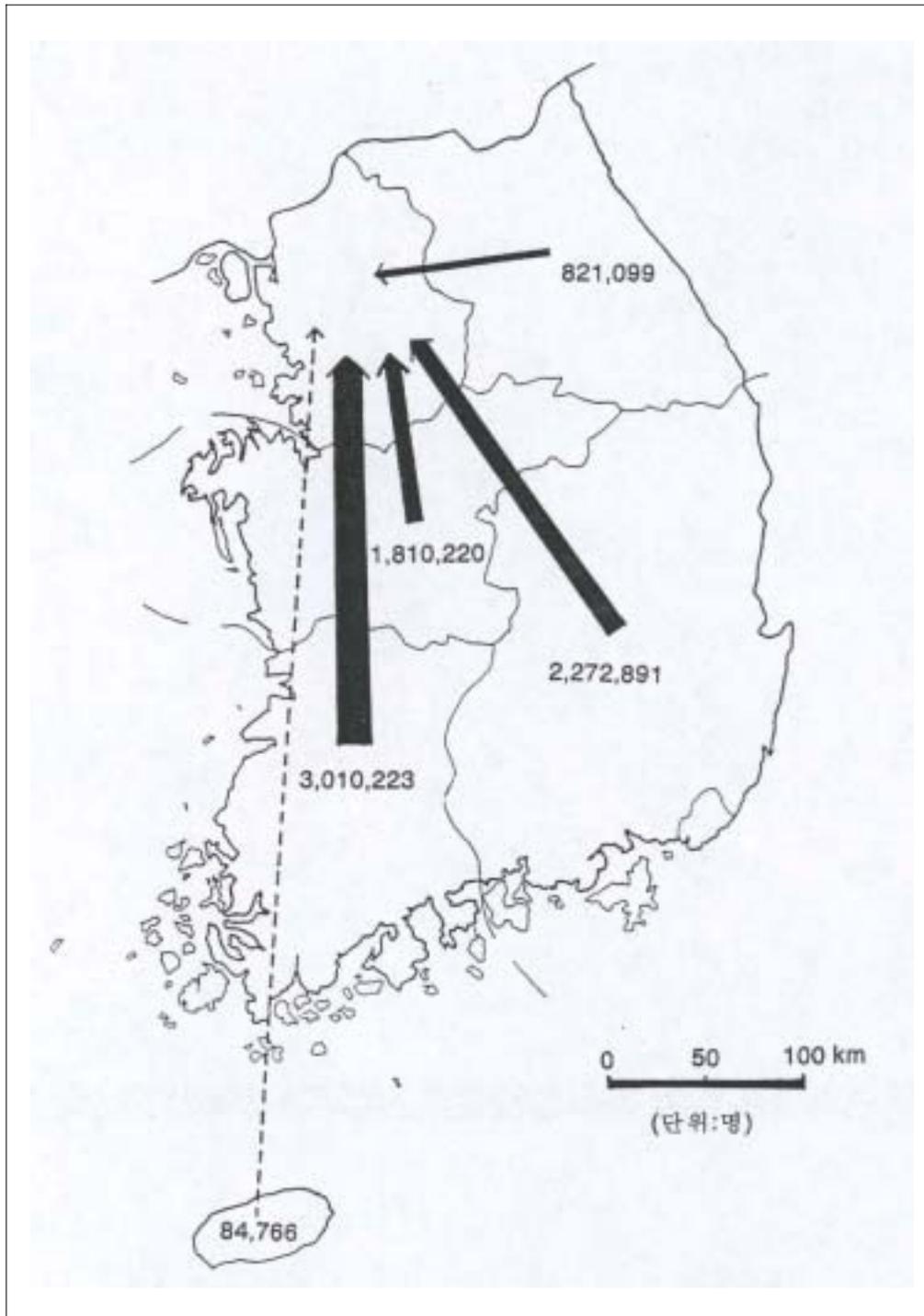
연도	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70	1,266,468	392,353	293,828	98,525	
	100	31	23.2	7.8	
1971	1,332,073	373,966	252,689	121,277	
	100	28.1	19	9.1	
1972	1,068,571	173,874	138,774	35,100	
	100	16.3	13	3.3	
1973	1,424,845	272,388	184,590	87,798	
	100	19.1	13	6.2	
1974	1,588,626	325,329	230,732	95,318	
	100	20.5	14.5	6	
1975	2,867,954	641,129	459,569	181,560	
	100	22.4	16	6.3	
1976	2,152,953	384,984	260,890	124,094	
	100	17.9	12.1	5.8	
1977	2,163,565	341,851	215,396	126,455	
	100	15.8	10	5.8	
1978	2,542,797	446,846	278,528	168,318	
	100	17.6	11	6.6	
1979	2,349,549	346,341	148,425	197,916	
	100	14.7	6.3	8.4	
1980	2,605,637	302,352	164,904	137,448	
	100	11.6	6.3	5.3	
1981	2,793,449	287,402	148,382	102,913	36,107
	100	10.3	5.3	3.7	1.3
1982	2,810,221	319,714	131,860	177,836	10,018
	100	11.4	4.7	6.3	0.4
1983	3,211,038	427,129	141,831	257,309	27,989
	100	13.3	4.4	8	0.9
1984	3,009,404	383,607	132,746	205,223	45,638
	100	12.7	4.4	6.8	1.5
1985	2,925,297	306,671	30,364	234,194	42,113
	100	10.5	1	8	1.4
1986	3,021,289	281,453	-5,823	256,297	30,979
	100	9.3	-5.823	8.5	1
1987	3,243,365	321,035	84,399	191,452	45,184
	100	9.9	2.6	5.9	1.4
1988	3,352,490	314,362	188,556	78,842	46,964
	100	9.4	5.6	2.4	1.4
1989	3,189,606	327,242	109,644	151,184	66,414
	100	10.3	3.4	4.7	2.1
1990	3,264,944	276,204	-90,992	250,511	116,685
	100	8.5	-2.8	7.7	3.6
1991	2,879,857	220,581	-36,879	177,062	80,398
	100	7.7	-1.3	6.1	2.8
1992	2,886,238	169,368	-104,884	214,871	59,381
	100	5.9	-3.6	7.4	2.1
1993	3,006,285	151,529	-182,632	294,498	39,669
	100	5	-6.1	9.8	1.3
1994	2,739,689	122,441	-236,497	322,077	36,861
	100	4.5	-8.6	11.8	1.3
1995	2,864,939	72,172	-321,898	375,514	18,556
	100	2.5	-11.2	13.1	0.6
1996	2,836,089	53,770	-211,237	252,669	12,338
	100	1.9	-7.4	8.9	0.4
1997	2,838,442	62,469	-178,319	213,748	27,040
	100	2.2	-6.3	7.5	1

수도권의 집중화는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큰 줄기를 이룬다. 1970-97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총전입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1970년에는 총전입자의 59.2%가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최고점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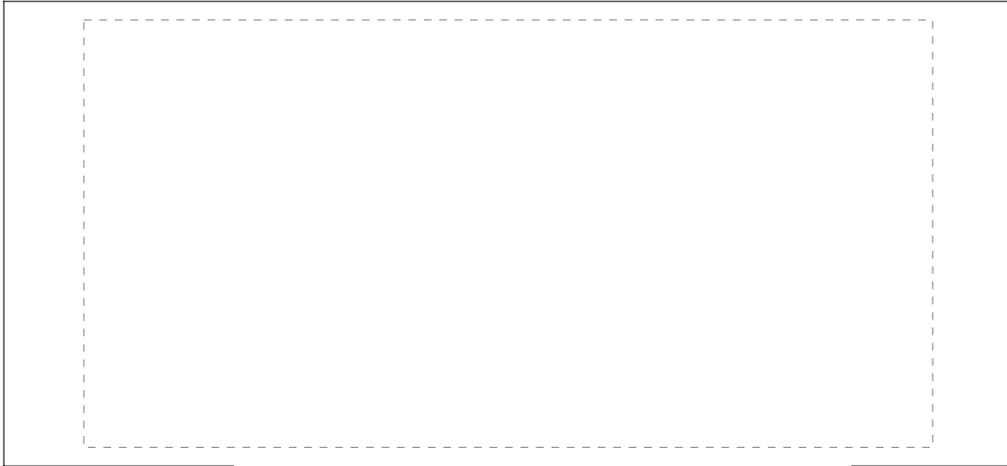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곧 197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인구의 두명 중 한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셈이다.

수도권 전입양상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총전출입 인구가 197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90년대에 들어와 그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1970년 부터 1975년의 기간 중에는 연평균 9.8%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75년을 분기점으로 이후 5년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시 1980-85년에는 연평균 0.2%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더이상의 증가현상은 없다.

한편 1970년 이후 28년의 기간동안 수도권 인구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은 전라권이다 (그림 9). 1970-97년의 기간동안 수도권의 순전입인구는 7,999,199명이다. 이중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도지역에서 전입해 온 이주자가 37.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부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남북도지역이며 수도권 순전입 이주자의 28.4%를 점유한다 (그림 10).



<그림 9>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규모



〈그림 10〉 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순전입인구, 1970-97

각 권역별 수도권 전입분포를 보면 8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0).

〈표 10〉 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순전입인구의 변화, 1970-97

(단위: 명,%)

연 도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계
1970	33,982	99,391	148,118	106,685	3,181	391,357
	8.7	25.4	37.8	27.3	0.8	100.0
1975	63,192	157,993	213,244	190,089	11,312	635,830
	9.9	24.8	33.5	29.9	1.8	100.0
1980	24,886	71,763	126,914	74,872	1,817	300,252
	8.3	23.9	42.3	24.9	0.6	100.0
1985	28,833	75,474	108,421	89,062	2,421	304,211
	9.5	24.8	35.6	29.3	0.8	100.0
1990	34,928	52,358	113,390	75,346	182	276,204
	12.6	19.0	41.1	27.3	0.1	100.0
1997	1,313	-10,574	30,019	40,977	735	62,470
	2.1	-	48.1	65.6	1.2	100.0
'70-'97 계	821,099	1,810,220	2,010,223	2,272,891	84,766	7,999,199
	10.3	22.6	37.6	28.4	1.1	100.0

자료: <표 1>과 같음.

1996년까지 수도권의 권역별 순전입 인구규모는 전라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1997년의 경우 경상권 이입자가 40,977명으로 65.5%의 비율을 점유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이 전라권으로 48.1%(30,019명), 그리고 강원권이 2.1%(1,313명), 제주권이 1.2%(735명)의 순서이다. 충청권이 6.1%(7,446명)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으로

순전입한 인구 중 58.8%가 서울로 집결하는데, 이중 59.0%가 경상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고, 다음이 47.0%의 비율을 보인 전라권에서의 전출자들이다. 이는 이전의 27년 기간과 비교해 이례적인 경우로 경상권에서 이주한 수도권 전입자들이 전라권에서 이주한 전입자의 수치를 능가한 것은 1997년이 처음이다.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강원권 전출자들은 서울보다 경기지역으로의 전입비율이 높아 1997년에도 65.4%의 비율이 경기도로 전입하였다. 충청권은 1996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전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997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수도권 각 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전출해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 (표 11).

<표 11> 수도권의 순전입인구, 1997

(단위 : 명)

전입 \ 전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계
서울	265	- 2,957	18,072	22,704	3,674	41,758
인천	189	- 2,275	1,057	2,566	- 27	1,510
경기	859	- 2,143	10,890	15,707	88	25,401
계	1,313	- 7,375	30,019	40,977	3,735	68,669

자료 : 표 1과 같음

수도권 전입인구 중 다수의 사람이 전라권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측면이다. 인구의 흡인기능은 흔히 제조업 등의 취업기회가 그 지역에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 전라권에서는 이렇다할 인구건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강력한 인구흡인력이 행사되고 있음이 상정된다.

2.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로의 전입인구가 많았던 수도권내의 인구이동 패턴은 1970년을 분기점으로 서울에서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인구전출이 더 많이 나타난다. 1970-97년의 기간 중 수도권 전입자의 서울 분담율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지역으로의 전입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로 집중되던 수도권 전입이 인천, 경기지역으로 반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12).

<표 12> 수도권 전입자의 분포, 1971-1997

(단위: 천명,%)

기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971-75	878(100.0)	579(65.9)	-	299(34.1)
1976-80	1,180(100.0)	735(62.3)	-	445(37.7)
1981-85	1,558(100.0)	822(52.8)	162(10.4)	574(36.8)
1986-90	1,744(100.0)	832(53.4)	199(12.8)	712(45.7)
1991-97	1,556(100.0)	561(35.8)	185(11.8)	764(48.9)

수도권내의 각 지역별 전입양상은 수도권 전체의 전입양상과 다소 상이하다. 1997년 서울의 경우 전남(8,518명), 전북(7,430명) 등지에서 인구 전입이 있었지만 전출인구의 초과로 순이동량이 負(-)로 산출되었다. 이에반해 전입초과지역인 인천은 서울(73.7%) 경기(20.7%) 경북(3.5%)의 순으로 전입인구가 많다. 경기도의 전입인구는 서울(92.2%) 전남(3.2%) 전북(2.4%)의 순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1989년을 정점으로 순이동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전출은 별 변동이 없으나 전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수도권 각 지역별 전출상황은 1997년의 경우 서울이 178,319명의 전출초과를 나타낸다 (표 13). 서울의 총전출자 중 대부분은 경기도로 이주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천으로 이입하였다. 인천의 전출자 역시 경기와 서울로의 전출이 주류를 이루며, 경기도는 서울, 인천, 전북의 순으로 전출자가 많다.

특히 서울시 주변지역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규 아파트 개발이 대거 일어나 서울과 인천의 많은 전출자들을 이입시킨데 큰 몫을 했다. 서울로부터 전입이 많은 지역은 고양시(서울 순이동 인구의 26.7%), 성남시(9.8%), 남양주시(9.2%), 의정부시(8.2%), 용인시(7.6%)의 순으로 집계된 것을 보아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수도권 인구이동의 주류는 권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70-94년의 24년간 전입자수의 변화가 경기도는 매년 평균 5%씩 증가하였다. 1995년 부터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신도시건설이 종료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서울로의 전입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인천, 경기 지역으로 전입초과가 지속되는 것은 서울 광역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 주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교외화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3> 수도권의 시도간 순이동, 1997

(단위:명)

전출 \ 전입	서울	인천	경기
서울	-	19,929	197,148
인천	- 19,929	-	- 5,601
경기	-197,148	5,601	-
강원권	265	189	859
충청권	- 2,957	- 2,275	- 2,143
전라권	18,072	1,057	10,890
경상권	22,704	2,566	15,707
제주권	3,674	- 27	88
계	-178,319	27,040	213,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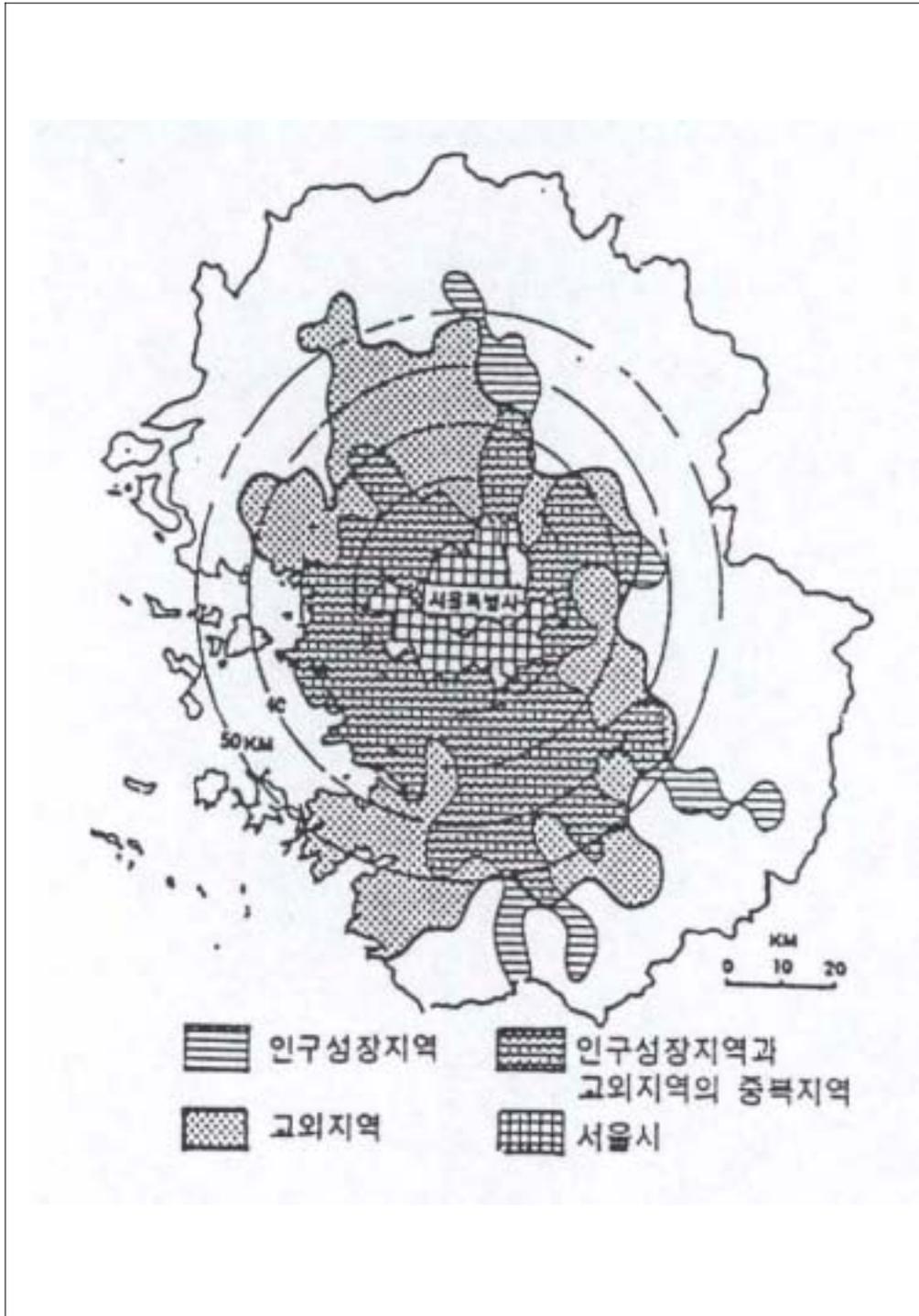
주 : <표 1>과 같음

이에 비해 서울은 수도권지역의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0.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1975년 이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1980-85년의 기간중에는 전출 인구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985년 이후 둔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외화 현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1970-75년 기간 중 전출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서울 주변의 과천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건설 및 邑級 도시의 활발한 성장에 힘입어 증가율이 다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교외화현상에 따른 인구이동 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국 인구성장지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단위지역의 인구성장율을 산출하였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인구성장율이 전국 인구성장율을 상회할 경우 이를 사회적 증가로 간주한다면 상대적 성장폭으로 인구밀집지역과 인구배출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1970-90년 기간중 전국의 연평균 인구성장율은 1.6이다. 동 기간 중 수도권의 각 단위지역의 연평균 인구 성장율이 전국의 인구성장율을 훨씬 웃도는 지역은 성남(15.0), 부천(10.4) 광명(10.1) 안산(10.9) 과천(8.2) 군포(12.1) 의왕(8.9) 등 수도권 신흥 도시들이다. 나머지 시지역도 모두 4.0 이상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 경기도 시지역은 전입인구의 선호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읍면지역으로는 양주군 회천읍(4.4) 주내면(1.6), 여주군 여주읍(2.4), 화성군 태안읍(3.3) 봉담면(2.7), 파주군 금촌읍(1.7) 조리면(2.0), 광주군 광주읍(4.5) 오포면(2.3) 실촌면(1.7), 포천군 소흘면(3.1) 신북면(1.7), 이천군 이천읍(4.1) 부발면(5.1) 대월면(2.7), 용인군 용인읍(5.6) 기흥읍(6.4) 포곡면(4.3) 모현면(3.1) 구성면(3.6) 수지면(7.4) 내사면(1.9), 안성군 안성읍(2.1) 대덕면(1.6), 김포군 김포읍(4.8) 고촌면(2.7) 등이다. 이들 시읍면지역은 전국인구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수

도권의 핵심적인 인구 이입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해 있거나 경인선, 경부선, 의정부-동두천축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통망을 따라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교외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11).



<그림 11> 수도권 인구성장지역과 교외지역, 1995

3. 수도권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구이동의 요인은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역정책적 배경 등의 여러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지역으로 이동한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이 들어서고, 주택이 건설되면 인구가 더욱 유입된다. 대도시의 경우 광범위한 교외화가 진행되어 광역도시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때 수도권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 주택수요와 공급, 교외화현상, 지역정책 등의 네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1) 산업구조의 변화

1960년 이래 추진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은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수출드라이브 정책, 도시집적화 정책, 전국토의 공업입지화 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전개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공산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력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기해 국력을 신장시키려 했던 것이었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집적의 경제논리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집적의 공간적 표출이 도시화 및 대도시권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만 해도 1차산업인구가 50.8%이고, 2.3차 도시적 산업인구는 49.2%인 1차산업 우위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에 이르러 2.3차 도시적 산업인구는 61.8%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79.2%로 상승했으며, 1995년에는 88.9%에 육박하여 우리나라는 도시형 산업국가로 변모되었다 (표 14).

국토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변모된 것은 도시화율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1960년에 28.0%였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70년에 41.1%로 상승했고, 1980년에는 57.2%, 1990년에는 74.1%, 1995년에는 89.0%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1995년의 경우 3천9백만명의 도시인구가 국토의 14.4%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그중 대부분은 전국토의 2.4%에 불과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심한 지역 편기현상을 나타내며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 이러한 인구의 편기현상은 전국을 인구밀집지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양분시켜 놓았다. 수도권은 인구과밀지역으로 변모되었고, 비수도권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했다.

<표 14>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970-1995

(단위: 명,%)

연도	1970	1980	1990	1995
1차산업	5,156,979 (50.8)	4,794,696 (37.8)	3,280,453 (20.8)	2,891,032 (11.1)
2차산업	1,548,127 (15.2)	2,887,654 (22.4)	4,382,347 (27.8)	5,899,183 (27.5)
3차산업	3,448,842 (34.0)	4,999,654 (39.4)	8,087,291 (51.4)	9,198,071 (72.1)
계	10,152,948 (100.0)	12,682,004 (100.0)	15,750,691 (100.0)	17,988,286 (100.0)

자료: 경제기획원, 1970,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어떤 지역에 제조업 생산체가 입지하면 취업기회가 풍부해져 인구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런면에서 인구의 흡인기능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은 제조업부문에서 전국 최대의 집중지역이 되어왔다. 전국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수도권 제조업 종사자의 분담율은 1970년에 48.3%였으나, 1980년에는 51%로 늘어났고, 1990년에는 55.8%로 상승하였다. 1997년에는 수도권에 40,681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지하여 58.2%의 분담율을 기록했다. 1980-85년 및 1985-90년의 기간동안 수도권 제조업의 연평균 집중추세를 보면, 제조업체수는 11.61% 및 10.10%, 그리고 제조업종사자수는 4.43% 및 4.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95년에는 제조업체수 증가율이 연평균 2.19%를 기록하였다. 특히 경기 인천지역은 1970-80년의 기간 동안 전국대비 제조업 종사자 분담비율이 5.0%나 증가하였고, 1980-90년의 기간에도 2.4%나 신장하여, 1970-90년의 기간 중 제조업종사자수의 격증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표 15> 지역별 제조업종사자 구성비 증가추이, 1970-1995

(단위: %)

지역	1970	1980	1970-80	1990	1980-90	1995	1990-95
서울	33.9	28.2	-16.8	26.8	- 5.0	19.7	-26.4
경기인천	12.1	20.9	72.7	26.7	27.8	30.8	15.5
충북	2.3	1.9	-17.4	2.3	21.1	3.2	38.8
충남대전	5.3	4.5	-15.1	3.8	-15.6	5.0	32.3
전북	4.2	2.5	-40.5	2.4	-4.0	2.7	11.1
전남광주	4.9	3.5	-28.6	3.8	8.6	4.2	10.5
부산	15.0	14.7	-2.0	10.8	-26.5	7.7	-28.3
경북대구	8.3	12.6	51.8	11.1	-11.9	12.3	11.2
경남	12.7	9.6	-24.4	10.9	13.5	12.7	16.5
기타	1.2	1.7	41.7	1.4	-17.6	1.6	12.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14>와 같음.

이러한 수도권 제조업 지표의 증가변화는 수도권 인구지표 증가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수도권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85년에 3.47%, 1985-90년에 3.22%, 1990-95년에 2.04%를 기록하였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1.0%로 상정하면,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증가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제조업 성장율과 인구이동율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는바,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시현되었다. 산업구조변화의 핵심인 제조업의 증가가 인구집중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런데 1980년 이후 인구이동과 산업구조변화와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업 성장이 인구증가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비해 1990년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증가와 인구성장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중 금융, 중개, 정보, 기술, 영상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 연구, 생산기술, 정보처리 등 지식산업의 성장이 인구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1980년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는 402천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919천명으로, 1997년에는 1,057천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980-95년의 기간 중 인구이동율과 생산자서비스업 증가율과는 0.7 이상의 고도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인구이동과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즉, 1980년 이후의 인구이동에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의 처리 및 의사결정에 관련된 첨단산업적 요소가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16).

<표 16> 지역별 생산자서비스 종사자수의 증가추이, 1980-1997

(단위:명,%)

지 역	1980		1990		1997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서울	208,030	51.7	418,063	45.5	512,908	48.5
경기인천	36,883	9.2	11,894	12.7	166,750	15.8
충북	7,819	1.9	19,727	2.1	20,627	2.0
충남대전	18,816	4.7	48,398	5.3	63,435	6.0
전북	13,113	3.3	28,158	3.1	27,948	2.6
전남광주	20,944	5.2	57,323	6.2	44,691	4.2
경북대구	32,871	8.2	74,453	13.6	72,668	6.9
경남부산	48,631	12.1	124,526	8.3	116,807	11.1
계	402,049	100.0	918,614	100.0	1,056,82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1980, 인구주택센서스보고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998, 지역통계연보

주: KISC(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중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항목의 수치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1994년의 경우 수도권에는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항공기, 첨단자동차 등 첨단산업 사업체수가 전국대비 57.1%에 해당하는 4,327업체나 입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자정보 사업체는 전국 대비 81.3%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며, 반도체업체는 전국대비 71.5%를 점유한다. 그리고 기업연구소, 엔지니어링 회사,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의 종사자수는 1994년에 약 14만명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72%가 수도권에 분포해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도권 집중율은 95.0%를 기록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공간적으로 도시화의 극대화 지역이 수도권인 것이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의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수도권은 인구 및 2,3차 도시적 산업의 집중이 탁월하다. 1995년의 경우 전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은 전국인구의 45.3%(20,190천명), 총사업체의 45.0%(1,234,976개업체), 공공기관의 30.7%(3,927개소), 그리고 의료기관의 46.4%(15,489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2) 주택 수요와 공급

인구가 유입된 지역에서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가구수가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여 새로운 주택이 건설된다. 또한 주택이 신축되면 신축된 주택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떠난 집에는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여과과정(filtering)이 전개된다.

가구단위의 이동(residential mobility)은 주택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1988년에 전국의 32천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구동태 표본조사에서 주택관계로 이주한 가구가 48.5%로 가장 많았다. 주택관계는 구체적으로 전세나 사글셋방에서 살다가 계약만료로 할 수 없이 이사하는 경우가 주류이고,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차위이다. 철거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약 3.5%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택사정은 가구단위 이동의 주요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최근에 이룰수록 가구와 주택의 증가폭이 크다. 1970-80년의 기간 중 전국의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3.6%이다. 동기간 중 인천(6.6%)과 경기도(5.3%)의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수원(7.6%) 부천(5.8%) 시흥(5.6%) 용인(4.9%) 의정부(4.3%) 등의 시군지역도 전국평균치를 상회하여 수도권의 인구 유입지역임을 보여준다.

한편 1970-80년의 기간 중 전국의 연평균 주택증가율은 3.0%로 집계된다. 동기간 중 수원(6.8%) 인천(6.1%) 시흥(4.0%) 의정부(3.4%) 등의 시군지역과 경기도(3.6%)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다. 그러나 경기도 인천의 전 시군지역의 주택증가율은 모두 가구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부천 용인 고양 등의 일부 시군지역의 주택증가율은 가구증가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1980-90년의 기간에는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에 힘입어 주택증가율이 크게 신장되었다. 동기간중 전국의 연평균 주택증가율이 3.0%인데 반해, 부천(13.2%)시흥(12.7%) 안양(10.0%) 수원(9.2%) 화성(8.9%) 인천(8.5%) 고양(7.4%) 남양주(7.3%) 의정부(6.5%) 성남(4.1%) 광주(3.5%) 등 서울로부터 40km 이내에 입지한 시군지역의 주택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서울로부터 다소 떨어진 평택(4.7%) 이천(3.4%) 용인(3.3%) 등의 군부지역에서도 상당한 주택증가가 이루어졌다. 1990-95년 기간 중에는 수도권에 5개 신도시 이외 미니신도시 건설이 잇따라 일어나 주택공급이 크게 이루어졌다. 전국 연평균 주택증가율이 5.0%에 비해 경기도는 8.7%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평택(34.6%), 군포(26.8%), 고양(20.4%), 성남(19.3%), 남양주(15.6%), 안산(14.0%), 구리(11.5%), 용인

(11.2%), 의정부(11.1%), 하남(10.0%), 안양(9.2%) 등 주택신도시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1980-90년의 기간 중 가구증가율도 두드러진다. 부천(12.8%) 시흥(10.9%)은 10% 이상의 가구증가율은 보였고, 수원(8.8%) 안양(8.4%) 광주(7.0%) 인천(6.9%) 고양(6.5%) 의정부(6.4%) 남양주(6.4%) 성남(5.2%) 등 서울로부터 40km 이내 시군지역의 가구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평택(3.6%) 이천(4.6%) 용인(4.4%) 등 군부지역의 가구증가율도 전국 평균치 3.5%를 상회하고 있다. 1990-95년 기간 중에는 전국 연평균 가구증가율이 2.6%인데 비해 경기도는 5.8%로 2배 가량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성남(56.7%), 평택(29.2%), 군포(17.5%), 고양(15.9%), 안산(15.2%), 남양주(13.7%), 용인(7.2%), 구리(6.6%), 의정부(6.3%) 등 주택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에는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 시기의 주택증가율 역시 많은 신장을 보여

그리고 1980-90년 기간 중 경기도는 1970-80에 비해 주택증가율(9.2%)이 2.6배, 가구증가율(8.8%)이 1.7배가 늘어, 최근에 이르면서 경기도에 주택과 가구가 격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분당(성남) 일산(고양) 중동(부천,인천) 평촌, 산본(안양,시흥) 등의 주택 신도시 건설이 주택증가의 주요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된다.

1994년의 경우 서울에서 전출한 81만명중 542천명이 경기도로 전출하여 경기도 총 전입자의 67.9%를 차지했다. 특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전입자 428천명중 76.4%인 327천명이 서울로 부터의 전입자로 집계된다. 1995년에는 이들 신도시로의 전입자가 최고치를 이루는 455천명이 이입되는데 이중 서울로부터 전출해 온 전입자는 346천명으로 76.0%의 비율을 점유한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를 유인하고, 또 서울에서 신도시로 빠져나간 자리에는 서울 또는 타지역으로 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주택여과 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주변지역의 저렴한 지가가 서울사람을 주변지역으로 유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주변지역으로 이주해 온 전서울주민의 35.0%가 싼 집값 때문에 이주했다고 응답한다(권용우, 1987). 서울과 주변지역간의 주택가격의 차이가 서울사람을 주변지역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실제로 1980년에 서울에서 살다가 1985년에 경기도로 이사해온 서울주민들이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소 증가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년전 서울거주자의 자택소유비율은 1980년의 30.5%(42,990가구)에서, 1985년에는 41.8%(93,047가구)로 높아졌다.

이와같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제측면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3) 교외화 현상

1970년 이후의 수도권 인구이동에서는 흥미있는 사실이 관찰된다.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의 서울로의 순전입이 훨씬 많은 규모로 일관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이동패턴은 197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1970년 이후 1986년에 이르기까지 서울로 부터 경기도로의 순전입 인구가 평균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으로 부터 경기도로의 인구유입 역시 크게 증가하여 1986년에는 경기도의 순전입 인구가 무려 256,297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로부터 서울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은 교외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센서스에서는 인천과 경기도 이주자의 40% 이상이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집계되고 있어, 수도권지역에서 중심도시인 서울주민들의 이주에 의해 인구교외화(population suburbanization)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교외화를 주도하는 서울이주자는 부천 인천 안양 광명 성남 수원 의정부 남양주 고양 광주 시흥 등의 시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인구교외화현상이 탁월한 지역은 대체로 서울과의 편도통행시간이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지역들로서 서울의 중심부로 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간선도로 주변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1986년의 경우 서울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5년전 서울에 살았던 주민의 46.6%가 계속해서 서울로 통근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에서 서울주변지역으로 이주해 간 주민들이 거주지만 서울주변지역으로 이전한 채 계속해서 서울로 통근하는 거주교외화(residential suburbanization) 현상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측면이다. 거주교외화의 공간적 형태는 기존의 간선도로망을 따라 두드러지게 돌출한 모습을 보이는 성형구조(star-shaped pattern)를 이루고 있다. 거주교외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주택이 건축되면서 주택도시화가 진행된다.

서울주변지역에서 전개되는 인구교외화와 거주교외화의 공간적 결과는 서울의 통근지역 형성 및 확장 양상으로 나타난다. 서울통근자가 다수 거주하는 시군지역은 서울 중심부로 부터 40km 이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중심부로 부터 50km 밖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서울로의 통근자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다.

1960년 이래 수도권지역은 공업기능의 집중지역이 되어왔다. 수도권역 내에서의 공업입지 변동을 보면 1960년대는 서울의 공업집중기, 1970년대는 서울 교외지역 공업

분산기, 1980년대는 서울 교외지역 공업성장기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1970년 이후의 수도권지역에서는 기업조직이 복잡해지고 경영관리기능과 생산기능이 전문화되면서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는 공간적 분업현상이 대두되어 공업기능의 교외화(manufacturing suburban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말의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중 80%가 서울시에, 5%가 인천 및 경기도에 본사를 입지시키고 있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기업 중 48%가 인천 및 경기도에 공장을 두고 있어 서울시로 부터의 공업교외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서울과 주변지역에서 전개되는 인구이동은 거주 및 고용교외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지역정책

1960년대 이후의 국토개발은 농어촌지역을 도시로 만들고 기존의 도시를 거대도시화하여 대도시권으로 전환시키는 도시개발의 지역정책으로 특징지워지는데 도시관리체계의 확립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는바, 대체로 4시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1960년대의 억제정책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서울과 그 주변에 국한된 분산배치의 국지정책을 전개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을 억제해 보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시기에는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 서울-인천 특정지역과 위성도시 구상(1965)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정책(1970) 등이 주요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장소가 계속 제공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개발정책으로는 현상유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둘째는 1970년대 전반기의 분산정책 시기이다.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어 대도시에 대한 적정관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적 균형개발을 목표로 거점을 지정하여 그 지역으로 인구와 공업기능을 분산시켜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때 제시된 도시개발정책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수도권 위성도시 배치정책(197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74) 등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영남과 호남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부족했으며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폐해가 노정되었다. 더구나 집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서울 주변으로 인구와 산업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셋째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전후까지의 수영정책 시기이다. 종래의 인구분산화 논리만으로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과 임시행정수도구상(1978),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성장거점 도시정책(1981), 수도권 정비계획법(1982) 등의 내용에서는 지역과밀화 내지 정주생활권정책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이전축진권역 등의 5대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리체계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대도시권으로 변모되어 국토공간체계를 주도하는 가공할 만한 <공룡>으로 변모한데 반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비대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 전국은 대도시 지역과 비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로 재편되었다.

넷째는 1990년 이후의 확대정책 시기이다. 1990년 전후하여 수도권 주변지역에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의 5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분당 신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도권 지역정책은 수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확대정책으로 변환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도시개발정책은 주택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분당 신도시 건설을 전환점으로 하여 수도권의 주택정책은 양도소득세, 채권입찰제, 아파트 재당첨기간 연장, 관인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 도입 등에 중점을 두던 종래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에서 재건축, 불량지구 개선, 영세민 주택건설, 2백만호 건설 등 주택생산 확대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에 와서 지역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이 규제완화 내지 경쟁력 강화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영종도 신공항건설, 고속전철건설, 첨단산업입지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어 인구의 흡인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제4장 결론

사회가 산업화되어 지역격차가 생기면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며, 인구의 흐름은 보다 풍요로운 지역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여 인구이동을 유도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이동 연구는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도간의 장거리 이동보다 동일 시도내의 단거리 이동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는 거리의 제약이 없다. 1970-97년의 28년간 전국의 순전입인구변화에서 꾸준히 陽의 수치를 나타내는 곳은 수도권 뿐이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 전입초과, 타권역 전출초과>로 압축된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이외의 부산·대구·광주·대전 광역시와 충청도 등 일부 市道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집중하고 있다.

1970년이후 우리나라 이동인구의 두명중 한명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1970-97년의 기간동안 수도권의 순전입인구는 7,999,199명이다. 이중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이주자가 37.6%로 가장 많다. 이는 타권역에 비해 전라권이 고용기반과 경제적 제기능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상정된다.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서울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주류이다. 1970년 이후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서울의 광역화 및 교외화현상과 경기도의 산업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로부터 40km이내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의 핵심적인 인구 이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해 있거나 경인선, 경부선, 의정부-동두천축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통망을 따라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교외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도시화가 극대화된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 특히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들어 첨단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신도시 건설은 주택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전입자 455천명으로 정점을 이루는데 1990년 이후 매년 70%를 상회하는 비율이 서울로부터의 전입자로 집계된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를 유인하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해 나간 자리에는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주택여과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주변지역에서 전개되는 인구이동은 거주 및 고용교외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로부터 40km의 간선도로변에는 거주교외화에 따른 서울이주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부천-인천축과 서울-용인축 사이에 위치한 서울로부터 25-45km의 서울의 서남부지역에는 공업교외화에 의한 고용교외화 양상이 나타난다.

1960년이후의 국토개발은 농어촌지역을 도시로 만들고 기존의 도시를 대도시권으로 전환시키는 도시개발의 지역정책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러한 지역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 權容友, 1991, “우리나라 住宅問題의 形成背景”, 應用地理, 14, 35-59.
- 金仁,權容友,1988, 首都圈 地域研究: 空間識과 對應政策, 서울大出版部.
- 박삼옥,1993, “수도권 제조업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방향,” 地理學論叢, 21, 1-16.
- 박상우,1992, “수도권 정책 전환의 방향,” 국토정보, 4, 3-22.
- 최병선,1992, “수도권 정책전환의 필요성,” 국토정보, 4호.
- 崔鎭昊,1982, “우리나라 人口移動類型과 特性에 關한 연구,” 國土研究, 1, 115-130.
- 河晟奎,1992, 住宅政策論, 博英社.
- 許在完,1994, “首都圈 新都市開發의 評價,” 住宅研究, 3(1), 75-100.
- Kim, Hunmun, 1993, "Analysis of Industrial Growth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 Search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Urban Planning of the Tri-nation's Planners Association in Taipei, pp. 27-41.
- Lewis,G.J.,1982, Human Migration: A Geographical Perspective, St.Martin's Press, New York.
- Noh,H.B.,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Ph.D. Thesis of the Univ. of Minnesota.
- Ravenstein,E.G.,1889,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52, 241-301, quoted in Dorige,G. and Tobler,W.,1983, "Push-Pull Migration Laws," Annals of the AAG, 70, 1-17.
- Todaro,M.P.,1969,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quoted in Silvers,A.L. and Crosson,P.,1983, "Urban Bound Migration and Rural Investment: The Case of Mexico,"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 33-35.